

# 악으로부터 벗어나기: 푸순전범관리소의 실험과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

이영진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제국 일본의 패망 이후 다수의 일본군 병사들은 전범으로 분류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중 만주에 있던 병사들은 시베리아에 억류되었고, 또 그중 일부인 969명의 병사들은 1950년 소련에 의해 신중국으로 인도되었다. 이 글은 신중국이 관리하던 푸순전범관리소라는 공간에서 6년(1950-1956)에 걸쳐 이루어진 ‘인죄(認罪)’와 ‘갱생(更生)’이라는 희유의 실험, 그리고 이곳에서의 경험이 이후 자신의 조국인 일본으로 돌아간 구(舊)전범들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사상사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신중국의 전범정책에 대해서는 교화의 측면에서 ‘푸순의 기적’이라는 찬사와 함께 ‘세뇌’라는 냉소적 비판이 공존한다. 이 글에서는 이 극단적인 해석들을 함께 검토하면서, 푸순전범관리소에서 이루어진 인죄의 핵심인 ‘용서’의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나아가 이러한 인죄와 용서라는 실험이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일본으로 귀국한 이후에도 자신들의 전쟁체험에 대한 성찰과 반전 평화주의로 이어지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인죄와 용서의 사상사적 의미에 대해 검토한다.

**주제어** 푸순전범관리소, 용서, 세뇌, 반전 평화주의

## I. 들어가며

1950년 7월 18일, 전후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있던 969명의 구 일본군 병사들을 태운 기차가 중소 국경마을인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의 쉰이펀허(綏芬河) 역에 도착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중국인민해방군’의 휘장을 두른 중국 측 접수공작대였다. 소련 측으로부터 중국 측에 이관(移管)된 병사들은 중국 측이 준비한 기차로 갈아타고 3일 후인 7월 20일 새벽 3시, 중국 동북지역인 동베이성(東北省) 푸순(撫順)에 전원 하차한 후, 역에서 약 1.5km 떨어진 수용소에 수감된다. 동베이전범관리소, 이후 푸순전범관리소라고 불리게 된 수용소가 바로 이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6B5A02004223).

곳이다. 그로부터 6년의 시간 동안 이들 병사들은 이곳에서 ‘전범(戰犯)’의 신분으로 생활하다가 1956년 6월 9일 선양(沈陽)에서 열린 특별군사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6명을 제외하고 전원 석방되어, 그해 6월에서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인양선을 타고 귀국했다. 이 글은 당시 푸순전범관리소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인죄(認罪)’와 ‘갱생(更生)’이라는 희유의 실험, 그리고 이곳에서의 경험이 이후 자신의 조국인 일본으로 돌아간 이들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사상사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여기서 ‘전범(戰犯)’이란 1945년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한 후 ① 만주를 점령한 소련군이 자국으로 연행해서 시베리아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다가, 과거 전시기 ‘중국인민에 대한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1950년 7월 18일 중국에 인도한 자, 소위 ‘시베리아 억류자’ 969명(1954년 기준으로 만주국 관련자 357명, 관동군 예하부대 585명 총합 942명. 27명은 그 사이에 사망으로 추정)과 731부대 관계자 4명, ② 산시(陝西)성에 잔류해서 국공내전 당시 국민당의 옌시산 군을 도와 공산당군과 싸우다 공산당의 포로가 된 군인 등 136명, ③ 죄행이 비교적 경미해서 허베이(河北)성 시링(西陵) 농장에서 ‘노동개조’를 강요당한 일본인들 중에서도 후에 전범이 된 417명, 합계 1,526명을 가리킨다. 이들 가운데 ①에 해당하는 전범들은 푸순전범관리소에, ②에 해당하는 전범들은 타이위안(太原)의 전범관리소에 이송되었다. 그리고 ③에 해당하는 ‘시링 조’로 분류된 전범들은 이미 1954년 8월에 기소면제되어 석방되었다(岡部牧夫 外編, 2010: 3-7; 大澤武司, 2016: 3-4).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합군은 독일, 일본 등 추축국을 상대로 전범재판을 시행했다. 당시 기소된 전범은 크게 세 범주로 분류되었다. 첫째는 국제법, 조약, 협정 또는 서약을 위반하는 전쟁 혹은 선전 포고 유무와 관계없이 침략 전쟁을 계획, 준비, 개시 또는 수행하거나 위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계획이나 공모에 참여한 죄, 즉 ‘평화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A급 전범, 두 번째는 전쟁법, 혹은 전쟁 관례 등 통상적 전쟁범죄(conventional war crimes)를 저지른 B급 전범, 세 번째는 전시기 민간인에게 자행된 살인, 말살, 노예화, 추방 및 기타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지른 인도(人道)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저지른 C급 전범이다. 하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 B급과 C급의 범죄는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은 A급 전범과 BC급 전범

재판이라는 두 갈래로 이루어졌다. 잘 알려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은 주로 A급 전범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다. 그리고 일본에만 한정한다면 BC급 전범으로 지목된 5,700여 명의 일본군 병사들이 중국,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등 과거의 전장에서 열린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林博史, 2005: 67-68).

1956년 6월 선양과 타이위안에서 열린 특별군사법정은 위에 열거한 것과 같은 정식 전범 재판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중국을 대표해서 대일전범재판을 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연합국의 일원이자, 여전히 UN의 인정을 받고 있던 장제스(蔣介石)의 중화민국정부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냉전 체제 하의 당시 세계정세에서 일본 정부 역시 중국에 구속되어 있던 ‘전범’들을 ‘억류자’로 간주하고, 이후 귀환업무에서는 그들을 ‘소위 중국전범자’로 부르는 등(大澤武司, 2016: 348), 신중국의 전범재판을 정식 재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신중국의 전범재판이 이러한 국제적 정세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 측면에서 1956년의 전범재판이 국제사회를 향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국가기구로서 신중국이 지난 전쟁의 전범을 재판한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장치적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연합국의 전범재판들과 다른 신중국의 전범재판의 독특한 점은, 극형을 받아 처형된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신중국의 전범재판에서는 사형수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무기형도 없었다. 유죄가 선고된 45명 역시 금고 8년에서 20년형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받았다. 12명의 전범에게 사형을 선고한 뉘른베르크 법정이나 7명의 A급 전범에게 교수형이 선고된 도쿄군사법정, 그리고 포로 학대나 민간인 학살 혐의로 기소된 5,700명 중 합계 984명에게 사형을 선고한(사형 확정 934명) 대일 BC급 전범재판과는 매우 대조적이다(林博史, 2005: 61). 두 번째로 재판을 받고 풀려난 과거 전범들의 이후의 행적이다. 연합국이 수행한 전범재판들의 전범들과 달리(대표적으로 극동국제군사법정의 A급 전범 28명은 자신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중국에서 풀려난 전범들은 귀국 다음 해인 1957년 직후 ‘중귀련’(중국귀환자연락회, 中国帰還者連絡会)이라는 단체를 발족시키고, 이후 평생에 걸쳐 과거의 반성에 기초한 반전 평화 활동을 전개했다. 도대체 6년이라는 기간 동안 푸순 전범관리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리고

당시 신중국은 왜 전범들에 대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것일까.

## II. 푸순전범관리소와 전범 관리(1950-1956)

소련에서 중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후 달라진 가장 큰 변화에 대해 구전범들은 이구동성으로 시베리아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자신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와 세심한 배려에 대해 증언한다. 변화는 소련에서 중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푸순으로 가는 기차는 시베리아에서 타고 왔던 화물열차가 아닌 4인 좌석의 일반 객차였고, 지급된 음식도 시베리아에서 배급되던 검은 빵과 건더기 없는 국물이 아닌, 쌀밥에 돼지고기 볶음, 달걀 볶음과 같은 성찬이었다. 푸순 전범관리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이러한 대우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급식 조건의 개선뿐만이 아니었다. 시베리아에서의 생활이 거의 강제 노역으로 채워져 있었던 반면, 푸순에서는 수용자에게 노동을 시키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은 학습, 운동, 오락 등으로 채워졌다. 사와다 지로(澤田二郎, 전 육군소위)는 “지금껏 살아온 인생 중 이만큼 자유로운 시간을 넉넉히 받아 나 자신이나 내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군대 시절이나 시베리아 시절에는 그저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熊谷伸一郎, 2005: 11)”고 그 시대를 회상한다. 일개 병사 출신으로 초기 중귀련 창설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 구니토모 순타로(国友俊太郎) 역시 당시 체험에 대한 회고에서 전범관리소의 생활을 “놀라움의 연속”으로 쓰고 있다.

먹고 잠자는 게 즐거움이 아니다. 관리소에 막 와서는 마작이나 화투, 바둑, 장기를 만들어 놀던 전범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많은 의문이 생겼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일을 생각할 수 없게 되자, 책 읽는 것이 큰 즐거움으로 바뀌었다. 모두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동료의 도움을 받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 같은 방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제는 갑자기 퍼져 나갔다.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주어진 자료는 무엇을 봐도 생전 처음 접하는 시각, 사고방식, 이론뿐이어서 모든 것이 놀라움의 연속이었다(国友俊太郎, 1997: 32 ; 김수용, 2025: 120에서 재인용).

푸순 전범관리소의 생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중귀련 회원들을 위시한 구

전범들의 많은 증언들이 나왔고, 또 이에 기초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미 출간되었기 때문에(熊谷伸一郎, 2005; 마루카와 데쓰시, 2009; 大岡部牧夫·荻野富士夫·吉田裕編, 2010; 澤武司, 2016; 김효순, 2020, 김수용, 2025), 이후의 논의를 위해 본 장에서는 이 시기를 5단계로 나누어 간략히 개괄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제1기는 입소 직후인 1950년 7월부터 한국전쟁 발발 이후 미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하얼빈 감옥으로의 이송, 그리고 전국(全局)이 안정되어 다시 푸순으로 돌아온 1952년 봄까지의 시기이다. 아직 본격적인 학습이 진행되기 전의 이 시기는 전범들이 소련과는 전혀 다른 중국 측의 인도적 대응에 놀라워하면서도, 자신들을 아직 전범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은 전쟁 포로니 즉시 석방하라는 요구를 하며 허세를 부리던 시기였다. 더구나 1950년 6월 발발한 한국전쟁과 같은 해 10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여파로 10월 18일 북한의 국경과 가까운 푸순에서 하얼빈으로 소개되면서 미군이 자신들을 구출해줄 것이라 기대하는 전범들의 반발이 심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소는 소개지에서 ‘인죄’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학습 반성’ 전에 그 기초가 되는 ‘정세 교육’과 ‘이론 학습’을 실시한다. 정세 교육에서는 『인민일보』 사설(“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은 반드시 실패한다”)이나 현재의 국제정세에 대해 스탈린이 『프라우다』 지에 발표한 담화 등의 문헌이 교재로 사용되어, 학습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론 학습’에서는 전범들 가운데 지원자 그룹을 모집해서, 일본어로 번역된 레닌의 『제국주의론』이나 일본공산당의 편찬 자료 등을 교재로 학습활동이 진행되기도 했다(김효순, 2020: 113-116). 1951년 초 한국전쟁이 38선 부근에서 교착상태에 빠지고 동베이 지역에 대한 미군의 위협도 사라지면서 3월 25일 전범 669명은 다시 푸순전범관리소로 이송된다.

제2기는 푸순으로 재이송된 1952년 3월부터 본격적인 인죄 과정이 시작되기 전인 1953년까지의 시기이다. 1952년 봄, 이들 전범에 대해 죄를 참회하는 적절한 교육을 수행하라는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지시 아래 모든 전범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학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관리소 측은 일본군 전범들을 ‘진보’ 조와 ‘반동’ 조로 분리하고, 전범들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학습소조를 구성하게 했다. 개별 학습소조별로 일본어로 된 정치경제학 문헌들과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론』 등의 문헌을 윤독하거나 자체 강의를 실시하는 등 학습 활동을 이어가

는 과정에서 계급이 낮은 위관급 이하 전범들 사이에서 변화가 먼저 나타나기 시작한다. 당시 이들에게 제기된 논제는 “누가 당신들을 전쟁범죄의 길로 몰아넣었나?”, “당신들은 왜 천황의 죽쇄에 묶인 희생자가 됐나?”, “어떻게 해야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구류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가?” 등이었다고 한다(김효순, 2020: 123-124). 이 시기는 이론 학습과 자신들의 경험이 서로 결합하면서 전범들이 전시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기였다(大澤武司, 2016: 63-64).

제3기는 본격적인 인죄, 즉 탄백(坦白/탄바이)이 진행된 1954년의 시기이다. 1954년 봄 ‘동베이(東北) 공작단’이 구성되면서 3월부터 최고인민검찰원 동베이 검찰단에 의해 개인 조사가 진행된다. 관리소 측은 당중앙에서 내려온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엄하게 다스리고 죄를 인정하는 자는 관대히 처분한다(抗拒從嚴, 認罪鍾寬)”의 원칙 아래 전범들에게 군대 간 전투 이외의 모든 잔학행위를 기억해낼 것을 요구하고, 왜 이와 같은 침략전쟁을 일으켰는지에 대해 소모임 학습을 요구했다. 자기비판의 철저함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정해지는데, 적발당하기 전에 스스로 나서 죄를 인정하고, 대중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폭로하고 자기비판을 하여, 대중의 심판을 받는 것이 ‘탄백’의 과정이었다.

본격적인 인죄가 시작된 계기는 1954년 5월 제39사단 232연대 제1대대기관총 제1중대의 중대장이었던 미야자키 히로무(宮崎弘) 대위<sup>1</sup>의 공개 탄백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반동분자로 분류된 미야자키 대위가 모두의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당시 중국 전장에서 저지른 학살을 절규하듯 고백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많은 전범들은 한목소리로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하고 있다(熊谷伸一郎, 2005; 絵鳩毅 2017: 266-268). 그때부터 사단별로 집단학습이 시작되고, 그 결과 위관급 이하의 일본인 전범들 중 대부분은 스스로가 저지른 죄행을 고백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4천여 건의 고발문서가 작성되고, 1만 4천여 건에 달하는 상관이나 다른 전범들의 죄행을 고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직책이

<sup>1</sup> 1954년 4월 푸순전범수용소에서 첫 번째 공개 인죄 단상에 섰던 미야자키 히로무 대위는 초급 장교인 소위 때 중국 농민 10여 명에게 스파이 혐의를 씌워 일본군 초년병으로 하여금 그들을 찢어 죽이게 하는 ‘척살훈련’을 실시했다고, 또 1943년 12월 말 중대장 시절 바이양쓰(白楊寺) 부락 습격 계획을 보고하고 실행해 촌민 수백 명을 죽였다고 고백했다.

높은 장관급, 좌관급 이상 간부 전범들은 냉소적이거나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 특히 일부 ‘반동’조들은 이러한 정책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전범이 아닌 포로로 대우하라.”고 관리소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둥베이 공작단은 전범들의 증언 이외에도 중국 각지의 현지조사 등을 통해 모은 증거, 혹은 위관급 이하의 전범들이 고발한 ‘상관의 죄행’에 관한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충분한 증거 수집을 한 후 ‘심문 조사’를 개시했다. 1년여에 걸친 공작단의 현지조사 끝에 얻은 정확한 범죄의 증거들, 위관급 이하 전범들의 적극적인 ‘인죄 탄백’ 및 예전 상관들의 죄행 고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장관, 좌관급의 군인이나 고급 문관들의 심경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大澤武司, 2016: 70-75).

제3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전범들에게 있어서도 관리소 생활 중에서 가장 격렬한 체험으로 기억되는 시기이다. 전범들은 탄백의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중국에서 자신의 행한 가해 행위를 되돌아보고, 그 행위의 책임을 상관에게 전가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개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분노나 절망과 같은 감정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증언에는 피해자들과 마주하면서 그들의 격렬한 분노의 대상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깨어나게 되었다는 내용이 종종 나타난다. 이 시기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주입(세뇌)받아왔던 천황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 타자의 분노나 슬픔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회복시키고자 한 관리소의 교육방침이 집약된 시기이기도 했다(岡部牧夫(外編), 2010: 37-38).

1954년 10월 말에 이르면 간부급 전범에 대한 취조와 증거 수집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① 인죄 고발운동의 성과를 살려 인죄와 참회 인식의 심화를 촉진하고 ② 죄행 자료의 심사 대조를 검증하고, 일본 전범을 심판 처리하기 위해 기소와 면소 준비가 진행된다. 기소를 담당할 영도(領導)소조는 중요 전범의 경우 사형을 포함한 엄중한 양형안을 제시했지만, 저우언라이는 중앙정치국회의(1954.12.28.) 토의를 거쳐 “일본인 전범을 관대하게 처리하며,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내리지 않고, 극소수의 사람에게 유기징역을 내린다(寬釋大多數 懲治極少數).”라는 결정을 내린다.

제4기는 최고인민검찰원당조의 기소 준비와 함께 형량안이 결정된 1955년 9



월부터 1956년 2월까지의 시기이다. 앞서 당중앙이 결정한 형량안의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초기에는 현장에서 많은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그 한 예로, 「최고인민검찰원당조보고」의 최초 형량안(1956년 9월 15일)은 “사형, 징역 15년 이상의 장기징역이 28명, 징역 10년에서 14년, 복무 후 1년에서 2년 후 석방이 48명, 징역 8년에서 9년, 형을 집행하지 않고 관대 석방이 79명, 기소면제·관대석방이 909명이었다. 현장에서 전범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피해지역에서의 광범한 조사를 통해 그들이 ‘인민의 의분(義憤)’을 통감했기 때문 일 것이다(大澤武司, 2016: 104-110 참조). 하지만 이후 당 중앙이 표명한 ‘관대처리’를 반영하여 심사과정에서 대다수가 기소면제 되고 기소 대상자 역시 계속 줄어들면서, 157명에서 107명, 51명, 최종 45명으로 확정되고(선양, 36명, 타이위안 9명) 형도 금고 20년(4명)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나머지 수감자 1,017명은 즉시 석방이 결정된다.

제5기는 1956년 2월에서 6월까지의 시기로, 석방 전, 미결 전범의 사회 복귀를 위한 참관학습과 함께 최종 판결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전범들은 신중국의 발전상을 위시해, 난징, 무한 푸순 등 과거 자신들의 침략지역을 답사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생생한 분노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일본군에 의한 참혹한 주민 학살이 일어났던 평頂산(平頂山) 지역 방문 도중 극소수의 생존자 중 한 명이었던 팡수룽(方素榮)의 원한 섞인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체험은 많은 전범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푸순에서 완고한 반동조로 간주됐던 가게 시게타(鹿毛繁太 전 만주국 경찰간부)는 “광활한 중국 땅은 그 어디에나 우리에게 살해된 중국 애국지사의 피가 스며들어 있다. 그 땅을 다시 밟으면서 자신의 죄를 더욱 통절히 느끼고 제국주의를 증오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김효순, 2020: 282).

참관학습이 끝난 지 2개월 후인 1956년 6월 선양(9~15일)과 타이위안(12~20일)에서 특별군사법정 개최된다. ‘일본이 중국 동베이 지역을 전면 침략한 전쟁의 죄행’이 재판의 중점였고, 기소 결정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최종 기준도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① 각각의 범죄사실이 확실해야 한다. ② 증거는 충분히 확실해야 하며, 더욱이 복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증거와 증거는 일치해야 한다. ④ 범죄의 인과관계는 명확해야 하며 죄책은 명백해야 한다. ⑤ 심문조사에



관한 모든 법적 문서와 법적 절차는 완전해야 하며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大澤武司, 2016: 128-129). 이상의 최종 기준을 보더라도 신중국이 자신들의 땅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전범재판의 완결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판장의 풍경 역시 뉘른베르크나 도쿄, 혹은 아시아 각 지역의 전장에서 이루어진 연합군 측의 전범재판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과거 전범으로 지목된 피고들이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거나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전의 많은 전범 재판들과 달리, 푸순의 전범들은 거의 전원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며, 언도된 양형에 감사를 표하는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되었다. 117 사단장(중장)으로, 재판에서 가장 중형인 금고(禁錮) 20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스즈키 히라쿠(鈴木啓久)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저는 처음에 포악한 죄상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인민의 인도적 대우에 감화되어 죄를 반성하기 시작했고 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죄로 말하면 법정에서 변호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정은 저에게 변호인을 알선해주고 또 스스로 변호할 권리까지 주었습니다. 중국 인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사죄합니다.”라고 발언했다. 금고 18년 형을 받은 후지타 시게루 59사단장(중장) 역시 형이 언도된 직후 자신의 목을 쳐달라고 오열하면서 “중국이 이 재판에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실 조사를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관대한 처분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김효순, 2020: 294). 이 역시 적어도 전범 관리부터 재판의 전 과정을 기획했던 신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의 전범 관리 체계의 우월성을 드러낸 하나의 성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전범 재판들과 달리 신중국 전범재판에서 언도된 형량 역시 지극히 관대했다. 전체 전범 1,062명 중 기소된 이는 45명에 불과했다. 사형 및 무기징역은 한 명도 없었고, 최고 형량은 금고 20년이었지만, 이전의 시베리아 억류 5년, 관리소 6년을 포함한 11년을 형기로 인정하는 관대한 것이었다. 기소 면제가 확정된 나머지 1,017명은 이후 세 그룹으로 나뉘어, 1956년 6월 21일 1진 335명이 인양선 코안마루(興安丸)를 타고 마이즈루(舞鶴)항으로 귀국한 이래, 7월 18일 2진 328명, 8월 21일 3진 354명이 차례로 귀국한다. 한편, 기소된 45명은 ① 육군 관계(선양), ② ‘만주국’ 관계(선양), ③ 특무기관 관계(타이위안), ④ ‘산시잔

류' 관계(타이위안) 등 4가지 조건으로 분류되었는데, 주로, 만주국, 정부관계, 군의 상층부(장관, 좌관급) 인사들이었다. 기소된 이들 대다수 역시 형기 만료 전인 1964년 4월 7일까지 귀국한다. 이로써 15년에 걸친 푸순전범관리소의 역사는 막을 내린다.

### III. 신중국의 전범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신중국의 전범 정책, 그리고 푸순 전범관리소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린다. 그 왼쪽 극단에 귀환한 전범들과 그들의 집단인 중귀련과 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푸순의 기적(撫順の奇跡)', 즉 관대함과 용서를 바탕으로 한 신중국의 전범정책에 대한 찬사와 절대적 지지가 있다면, 그 오른쪽 극단에는 신중국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정책, 즉 '세뇌(洗腦)'에 다름 아니었다는 냉소적 비판이 존재한다. 동서 냉전이라는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정책에 대한 이런 극단적으로 상반된 평가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우선, 보수 우파들이 주장해온 '세뇌'라는 담론이 만들어져 온 역사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신중국의 전범정책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되어온 '용서'가 갖는 다양한 함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1. 고백이라는 장치: '세뇌'인가, '교화'인가

중국에서 귀환한 이들 전범들이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했던 것은 중국 공산주의에 세뇌당해 빨갱이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의 시선이였다. 그들의 도착을 전하는 당시 일본의 신문들은 거의 예외 없이 냉소적으로 그들이 “도장을 찍은 듯이” 자신의 죄를 후회한다”며 중국으로부터 세뇌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sup>2</sup> 그리고 이러한 낙인은 이후에도

<sup>2</sup> 푸순 전범수용소에 대한 국내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저서인 『나는 전쟁범죄자입니다』의 저

사라지지 않아 많은 귀환 전범들은 그들의 행동을 의심하는 형사들이 따라붙거나 감시하는 등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세뇌(brain washing)’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나 중국인민지원군의 포로가 되었던 미군 포로 중 송환을 거부하고 북한이나 중국에 남은 미군 포로를 설명하기 위해 에드워드 헌터(Edward Hunter)가 제안하고 미국 CIA에 의해 발전된 중국 사상전에 대한 낙인 같은 개념이다(김수용, 2025: 5). 헌터는 『붉은 중국의 세뇌』[1951]라는 책에서 “‘세뇌’는 … 자유세계의 정신을 파괴하여 자유세계를 정복하려는 무시무시한 공산주의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쓰면서, “중국 공산당들이 자신들이 악용한 심리학과 도착적 복음주의의 결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그리고 “자유세계와 자유의 개념 자체를 상대로 벌이는 심리 전쟁에서 나타나는 새롭고 소름끼치는 극단성을 처음으로 폭로(Hunter, 1951; 딘스데일, 2024: 117에서 재인용)”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생포된 미군 포로들이 이후 세군전을 벌였다고 자백하면서 반전 선전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소수의 포로들은 휴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귀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미국 정부는 이들 포로들에 대해 사악한 공산주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딘스데일, 2024: 121-122).

심리학계를 중심으로 공산주의 국가의 심리전, 즉 세뇌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이 시기였다. 1961년에 초판이 나온 심리학자 로버트 리프턴의 저서 『사상 개조와 전체주의의 심리학: 중국의 ‘세뇌’에 대한 연구』는 당대 서

자 김효순은 기자 출신답게 당시 중국 전범들이 귀환하던 당시 그들을 바라보는 일본 언론계의 냉소적 시선과 그 산물인 세뇌 담론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책에 소개된 『아사히신문』의 1956년 8월 1일 칼럼인 「천성인어(天声人語)」의 한 대목은 당시 일본 사회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세뇌에 대한 시각을 잘 보여주는 글이라 다시 인용해본다. “세뇌라는 말이 있다. 영어로는 브레인워싱(brainwashing)이라고 한다. 세뇌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이번 고안마루(興安丸) 귀국자가 가운데 328명의 ‘석방 전범’은 도장을 찍은 듯이 같은 것을 말한다고 보도된다. 10년이 넘는 고통스러운 억류에도 조금도 불평을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과거의 죄를 모두 참회한다고만 한다. … 침략의 죄를 개인으로서 참회하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지만, 일반 귀국자가 각자의 생각을 가진 것과 비교하면 ‘전범’은 역시 ‘세뇌’의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다. 10년이나 사회에서 격리돼 아침부터 밤까지 반복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인간은 같은 거푸집에 넣어졌을 것이다. 전시 중 일본인도 해외 뉴스에는 귀가 막혀 있어 대본영의 제멋대로 발표만 믿게 되어 ‘성전’이나 ‘승조필근(承詔必謹)’이라는 강제적 최면술에 걸려 하나의 거푸집에 부어진 것이다(이상, 김효순, 2020: 323-326).”

구인들과 중국인들에게 가해진 신중국의 심리정책의 본질을 ‘세뇌’ 혹은 ‘사상 개조(thought reform)’라 정의하면서, 중국 당국에 붙잡힌 미군 포로나 중국인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그 특징들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리프턴은 사상개조라는 방법이 예전 러시아에서도 유사하게 사용된 적이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자백 후에 숙청이나 추방이 뒤따른 반면, 중국의 경우 자백의 목적이 재교육과 갱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중국의 사상개조는 강압적 측면도 있지만, “범죄사상을 없애고 새로운 도덕규범을 확립”하고자 하는 복음주의적 열정과 맞닿아 있다면서, 사상개조를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으로, 공개 자백을 “무아지경의 회개와 연극적인 참회”로 파악한다(Lifton, 1961: 17, 397; 딤스태일, 2024: 110에서 재인용). 다시 말해 “고해성사는 곧 속죄이자 구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석방된 후에도 새로운 이념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 리프턴은 죄수들은 석방되었을 때 충격을 받았고, 수감자들은 떨쳐낼 수 없는 슬픔과 세상에 대한 혼란스러움, 가시지 않는 죄의식과 수치심을 안고 휘청거리며 중국을 빠져나왔으며, 세뇌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딤스태일, 2024: 112).

물론 냉전 시대 서구/미국의 사회과학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 문제는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더 이상 자세히 다루지 않을 것이다. 다만, 리프턴이 상세히 묘사한 신중국의 포로 심문 방법 및 절차는, 푸순 전범수용소에서 일본군 전범들이 겪었던 일련의 과정과도 많은 부분 그대로 겹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리프턴의 분석대상이었던 미군 포로들과 일본군 전범들의 전후의 삶의 궤적이 달랐다고 한다면, 이는 양자의 성장 환경의 차이-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군국주의 국가인 일본이라는 성장 환경의 차이-, 그들이 체험했던 전장의 차이-한국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차이-, 그리고 인죄 및 탄백 경험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라는 정도의 추론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리프턴의 예측과 달리 대다수의 일본군 전범들은 중국에서 풀려난 후에도 결코 자신들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 반전평화활동을 이어갔으며, 자신들의 경험에 대한 많은 성찰의 기록들을 남겼기 때문이다.

인죄와 탄백의 절차들은 분명 신중국이 고안한 것이지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며 일본군 전범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자각하고, 피해자의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간성을 회복해갔다. 물론 인죄 과정의 고통스러움은 많은 전범들의 회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다. 에바토 쓰요시(絵鳩毅)는 자신의 회고록 『황군병사, 시베리아 억류, 전범관리소(皇軍兵士, シベリア抑留、戦犯管理所)』(2017)에서 칸트 윤리학 전공자다운 치열함으로 자신의 전쟁체험 및 관리소 생활과, 인죄 과정 당시의 강한 내면의 갈등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 역시 처음에는 자신은 결코 주도적으로 전쟁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고, 다만 대대장의 명령으로 4명의 중국인 포로를 학살하는데 가담한 적은 있다는 식으로 탄백서에 자신의 범행을 객관적으로 써내려갔다고 한다. 하지만 제출한 탄백서가 연이어 관리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좀 더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된다. 그 고민의 과정을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지금까지의 나는 ‘대대장의 명령이었다’, ‘초년병에게 개시 호령을 내렸을 뿐’이라고 ‘자기를 변호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생각해보면 나는 가해자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마을 바깥에서 중국인 4명을 기둥에 묶고 초년병 20명에게 총검으로 찌르게 시킨 (나를 포함한: 인용자 주) 저 30명의 일본군 병사는 피해자(중국인민)의 입장에 서면 모두 같은 ‘살인집단의 일원’에 지나지 않은 것은 아닐까(絵鳩毅, 2017: 271).

그때까지 ‘명령에 따랐을 뿐’ ‘나에게 책임은 없어’, ‘전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살해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변명임을 깨달으면서, 잔학한 명령을 내린 책임은 실행자로서의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sup>3</sup> 구니토모 순타로 역시 그들이

<sup>3</sup> 다른 인터뷰에서 그는 2절에서 언급한 미야자키 히로무 대위의 인죄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자신의 반성문 가운데 ‘진심으로 사죄합니다’라고 썼지만, M[미야자키 히로무(宮崎弘)] 대위: 인용자 주]은 단상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어떠한 처벌도 받아들일 각오입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M은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을 한 것이다. 그는 우리들처럼 ‘구원’을 기대하며 ‘사죄의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단지 순수한 ‘사죄’를 위해서 낭떠러지에서 자신의 몸을 던진 것이다. 진정한 ‘인죄’란 M과 같이 ‘자기’를 버리는 것-죽음을 각오하는 것-이리라. ‘가해자’로서의 자신의 몸을 ‘피해자’ 앞에 던지며 ‘부디 마음 편하신 대로 처단해주세요’라고 말한 것이다. 겨우 머릿속으로 이것 ‘인죄’의 의미-가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絵鳩毅, 1990:

귀환한 1956년의 시점에 이미 널리 퍼졌던 ‘세뇌’ 담론에 대해 만년에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어쩌면 그는 세뇌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주체적으로 성장해간다는 것을 강조한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누구든 태어났을 때부터 ‘사상’ 같은 게 있을 수는 없다. 순수하고 완전히 백지 상태로 이 땅에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태어난 그 세계는 그것이 단일하든 다양하든 이미 만들어진 가치관이나 도덕관이 지배하는 사회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기존 생활환경이나 사회 환경을 수용하면서 성장해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누구든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사람의 책임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점차 ‘염뇌’(染腦)되면서 성장해가는 것이다(国友俊太郎, 2006).

또한 모든 귀환 전범들의 증언에서 공통으로 지적되는 것처럼, 신중국의 사상개조 정책, 그리고 이에 따른 인죄와 탄백의 과정은 그들에게 있어 유년 시절부터 일본 사회 내에서 주입받은 천황제 이데올로기(황국사관), 일본 군국주의의 세뇌로부터 벗어나는 일종의 ‘탈-세뇌’ 과정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1945년 산시(陝西)성 잔류에 동참해서 타이위안에 수감되었다가 다른 전범들과 함께 1956년 귀환한 작가 히라노 레이지(平野零児)는 귀환 후 썼던 「세뇌 후 3년(洗腦後の三年)」(자필유고집 『らいちゃん』[1962]에 수록)이라는 글에서 신중국의 사상개조가 민주화와 탈식민지화를 추진해나가야 하는 새로운 중국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적 조치이며, 이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이루어졌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중국에서의 사상개조의 핵심은 평화주의 정도이며, 이를 세뇌라 부른다면 군이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군이 이를 세뇌라 부를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이를 문제시하면서도 자신들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가 갖는 더블 스탠다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石田隆至·張宏波, 2022: 209-213).

이 6년간 우리들은 자연스레 공산주의국가가 신봉하는 맑스 레닌주의를 학습했다. 하지만 이것이 ‘세뇌’는 아니었다. 중국이 나를 석방한 것은 ‘억류기간 중 뇌우침(梅

悟)의 태도'가 좋았기 때문이지 맑시스트가 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그래서 귀국했을 때도 마이즈루에서 바로 요요기의 일본공산당 본부로 달려가거나 하지는 않았다. 억류 중 생각했던 것은 앞서 서술한 나의 반생의 회고뿐이며, 그다지 자기반성은 하지 않았다. ... 하지만 '평화는 어디까지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내가 '세뇌'를 당한 결과 얻은 사상은 이 정도뿐이다. ... 나의 사상 개조는 이 정도이다. 이 정도의 반성은 8천만의 올바른 일본인이란 오늘날 누구도 의식하고 있는 문제이다. 본 잡지가 안심하며 나의 투고를 십 주년 기념호에 받아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平野零児, 「洗脳後の三年」/ 石田隆至・張宏波, 2022: 213에서 재인용).

또한 전후 일본사회의 세뇌 담론은 중국이 이들 구(舊)전범들에게 어떤 이데올로기적 개조 정책을 취했는가에 대한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인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전후 일본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온한' 움직임들에 대한 차단, 방어, 낙인찍기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은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전후 일본, 특히 1950-60년대 일본사회의 전쟁(책임) 인식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전후 일본 사회에 만연한 전쟁책임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吉見義明, 1992; 요시다 유타카, 2004). 전후 일본 사회에서 전쟁책임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자민족중심주의적 전쟁관, 전통적인 아시아 멸시관, 천황관 등은 형태를 바꿔가면서도 강고하게 존속되어 왔던 것이다(吉見義明, 1992: 99). 그런 분위기에서 신중국에서 돌아온 귀국전범들이 표명한 가해책임인식은 좌우를 불문하고 지지되고 있던 '평화주의'의 존재방식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피해자의식에 기초한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 그리고 가해책임을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욕망, 혹은 선택이 '세뇌' 담론의 온상이 되었다는 지적은 그런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다시 말해 '전쟁'이라는 추상적인 악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면서 전시기부터 계속된 자민족우월감/중국 멸시로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에 있어, '세뇌' 담론은 매우 편리한 낙인이었다는 것이다(石田隆至・張宏波, 2022: 205).<sup>4</sup>

<sup>4</sup> 신중국에서 돌아온 귀국전범들은 모두 중국으로부터 세뇌되었다는 전후 일본 사회의 여론을 분석하면서 이시다와 장은 '세뇌' 담론이 전쟁범죄를 불문에 부친 채 평화주의로 이행하려는 곡예와 같은 몸짓을 증거하는 것이자, 그 몰이해성이 이해나 대화를 애초부터 봉쇄해 버리는 부정성의 원천이라고 지적한다. '세뇌' 담론은 스스로의 전쟁범죄를 직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부정을



## 2. '용서'란 무엇인가

신중국의 전범 정책에서 기본적으로 현실 정치적 측면의 고려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최근의 연구들에서 공통으로 지적하는 바이며, 그 핵심은 대일외교와 동서냉전이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정치적으로 일본인 전범을 이용했다는 것이다(岡部牧夫 外, 2010; 大澤武司, 2016; 坪田典子, 2019). 실제로 전범들에 대한 초기 중국공산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관용보다는 '엄벌주의'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1945년 9월 14일 연안의 『해방일보』는 「전쟁범죄를 엄정하자(嚴懲戰爭犯罪)」라는 사설에서 전쟁범죄에 대해 “반드시 중앙에서 지방, 군인 관료에서 재벌가 정치가,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 일본군 점령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의 조사와 검거를 진행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는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의를 위한 것이며 미래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염송심·유지원, 2020: 337-338에서 재인용). 하지만 국공내전이 한창이던 당시 여전히 국제적으로 대표성을 공인받은 국민당의 난징정부가 전범재판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 측은 사실상 전범재판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공산당 측의 엄벌주의 입장은 당시 중국 대륙의 일본군 전범재판에 대한 국제적 대표성을 주관했던 국민당 정부의 “이덕보원·관대처리(以德報怨·寬大處理)” 방침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측면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1950년 7월 소련으로부터 전범들을 수용하면서 신중국은 처음으로 전범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이들 전범의 수용은 애초부터 신중국을 국제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스탈인의 의도를 중국이 받아들인 결과라는 점에서, 이들 전범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처음부터 국가정책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이는 전범 정책의 총지휘자가 당대의 실세인 저우언라이 총리였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坪田典子, 2019: 65-66). 하지만 한국전쟁 등 국제사회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신중국 내 전범들의 실체 및 관리는 국제사회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신중국의 전범 정책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54년 7월 중국을 방

문한 일본평화대표단에게 중국홍십자회 회장 리더취안(李德全)이 “각종 죄들을 범한 일본 병사들 중 일부는 중국인민해방군의 관대한 정책에 따라 ‘사면’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19일 중국인민정부혁명군사위원회 총정치부의 사면에 의해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던 417명의 ‘전범’이 석방된다. 이어 같은 해 10월 11일 저우언라이는 “인민해방군의 역사적 전통에 따른 관대정책”이 취해질 것을 밝히면서, “전범 중에 특별히 중대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대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취해 잘 처리하겠다(『世界』 1954년 12월호).”라는 방침을 처음으로 밝힌다. 더욱이 방중의원단에게 푸순 전범관리소의 참관이 허용되어 관리소의 생활 모습도 일본 사회에 알려지게 된다(岡部牧夫 外編, 2010: 23-24).

오사와 다케시(大澤武司, 2016)는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1954년 갑자기 전범문제가 진전된 배경으로 중국의 대일정책상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 중일국교정상화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전쟁 종결 이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은 평화공존을 위한 인민외교를 전개하는 것으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도모했고, 전범문제 처리는 ‘정상관계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자 이를 위한 ‘구체적 장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측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 측이 국교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으면서 그 기대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전범문제 처리는 국교정상화 이후라고 말해온 중국 측의 기본적인 자세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대응의 변화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전범석방이라는 ‘구체적 조치’를 더욱 진전시킴으로써 국교정상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그의 가설이다(大澤武司, 2016: 24-26). 당시 신중국의 국내 정세를 보더라도 1956년은 소련의 스탈린 사후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의 영향이나 ‘백화제방, 백가쟁명’으로 요약되는 여러 사상들의 보급과 전파 등 비교적 자유로운 공기가 지배하는 시기였고, 전범처리 역시 이러한 국내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1957년 6월에 접어들면 마오쩌둥 주도의 반우파투쟁이 발동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혁명론’이 제창되는 가운데 마오쩌둥 개인이 주도하는 중국공산당의 ‘독재’적 경향이 강해지면서 대일외교를 포함한 내외정이 급진화해 간다

는 점에서 1956년이라는 타이밍은 실로 절묘하다는 해석이다(大澤武司, 2016: 232-233).<sup>5</sup>

정황을 종합해 본다면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엄하게 다스리고 죄를 인정하는 자는 관대히 처분한다(抗拒從嚴, 認罪鍾寬)”라는 신중국 전범 정책의 기본 방향은 당시의 국제정치적 정세를 반영하면서도 다분히 자신들의 혁명정치를 널리 알리려는 의도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신중국의 전범정책에 대한 기존의 입장이 ‘푸순의 기적’으로 상징되듯 지나치게 혁명적 이상주의적 서술 일변도였다는 점에서, 신중국의 전범정책을 당시 중국사회 및 국제적 정세 속에서 파악하는 이상의 시각들은 정책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

한편, 신중국의 관대한 전범정책의 의의를 평가하면서도, 이 정책이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강요함으로써 정작 그들의 상처를 아무만져주지 못한, 내부부를 향한 또 다른 인격 살인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전범들과 수용소 관리들의 회고에 따르면, 수용소의 직원들은 전범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지시한 중앙정부의 시책에 대해 초기에는 울분을 터뜨리며 전범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원소속 부대로의 귀환을 요청하는 직원들도 있었다고 한다. 직원들 중에는 전쟁기간 동안 일본군에 의해 혈육이나 지인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증오하는 일본군들을 관대하게 대하라는 당국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中国帰還者連絡会, 1995; 김원, 1995).<sup>6</sup> 하지만 인민

<sup>5</sup> 마루카와 데쓰시 역시 중국전범정책의 정치성에 대해 최소한 말할 수 있는 것은, 소련에서 스탈린 비판(1956)을 계기로 한 사회주의 국가권에서 시작된 사상 동요 이전에는, 마오쩌둥이 말하는 ‘신민주주의 이념’(사회주의로의 전화를 시간이 걸리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테두리)이 유지되었던 시기라는 것,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시기 신중국에서는 어떻게 ‘동지’를 찾아낼 것인가 하는 심리적 경향이 강했다는 것이며, 한편 반우파투쟁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그 이전과 비교하자면 어떻게 ‘적’을 찾아낼 것인가에 그 심리적 경향이 옮겨졌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전범 관리소에서 일본군이 ‘사상 개조’와 잔학행위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인죄’ 운동을 경험했던 무렵은 바로 신중국이 ‘동지’를 찾아내려 했던 시기라는 것이다(마루카와 데쓰시, 2009: 139-140 참조).

<sup>6</sup> 중귀련이 편한 『覺醒: 撫順戰犯管理所の六年』(1995)에 실린 전범관리소 직원들의 회고에는 초기 근무 당시 당국의 전범정책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상황들이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나중에 전범 관리소 소장이 되는 김원 역시 일본어에 능숙하다는 이유로 전범관리소에 파견되었지만, 그 직무를 맡는 것이 싫어 여러 번 전근을 요청했지만, 손명재 소장의 간곡한 권유로 남게 되었던 사정을 회고하고 있

들에 대해 당이 압도적 우위를 가졌던 당시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보다는 당의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되었다. 이는 1955년 전범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최고인민검찰원당조에 당 중앙이 하달했던 매우 관대한 전범정책(사형이나 무기징역은 내리지 않고, 극소수의 사람에게 유기징역을 내리게 하라)에 대해 아래로부터 터져 나온 많은 반발과 호소를 전해 들은 저우언라이가 하달한 아래의 답변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김원, 1995: 213-215).

간부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당 중앙의 결정은 고칠 수 없다. 책임자부터 생각을 바꾼다면 아래 간부도 생각을 바꿀 것이다. 중·일 관계를 대국적으로 심사원려(深思遠慮) 차원에서 관대한 처리가 필요하다. 일본인 전범을 관대하게 처리하는 정책은 정확하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2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이 정책이 참으로 현명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 중앙의 결정을 추호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반복한다. 한 사람도 죽이지 말고, 극형에 처하지도 말며, 도형(徒刑)에 언도하는 수효도 최대한 줄여야 한다(김원, 1995: 215; 김효순, 2020: 269).

과연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중앙정부가 가해자들에 대한 용서의 자격을 갖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 또한 ‘집단적 용서’는 가능한가. 이 물음들은 홀로코스트 이후 윤리의 문제를 성찰한 많은 사상가들의 중요한 논의의 주제가 되어 왔다. 데리다는 ‘용서’라는 이름의 세미나에서 “누가 용서하는가? 누가 누구에게 어떤 시기에 용서해달라고 하는가? 누구에게 이런 ‘권리’나 ‘권력’이 있는가(데리다, 2019: 18-19)?”라는 물음을 던진 바 있다.

“오늘 마주친 이 난해한 질문의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 [...]는 바로 ‘복수인 단수’입니다. 즉 ‘하나지만 그 이상인 대상, 그룹이나 집합, 공동체(예컨대 홀로코스트의 피해자들이었던 유대인)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가, 그럴 권리가 있는가, 과연 그것은 용서의 의미에 부합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유일한 잘못이나 범죄에 그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타인에게 사죄하거나 피해자가 아닌 다

다(김원, 1995: 101-104).

른 사람이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데리다, 2019: 20)?”

사실, 이 물음은 우리에게 1990년대 ‘국민의 정부’ 수반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전두환 석방 및 일련의 정치적 용서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의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과연 누가, 무엇이 승리한 것일까? 우리의 이성인가, 아니면 야만인가(문부식, 1999)?” 이러한 물음에는 그 용서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누구이어야 하는 가라는 곤혹스러움이 묻어 있다. 정치적 용서는 항상 주권적인 권력을 상징하며, 어떤 정상 상태를 재확립하려고 한다. 국민의 정부 시절 두 독재자의 사면으로부터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용서 담론에 이르기까지 1980년 오월 이후 한국사회에서 용서는 항상 주권 권력의 행사와 함께 이루어졌고 어떤 규범화, 정상화(정치적 타협)를 지향해 왔다(이영진, 2022: 34-35 참조). 그것은 데리다의 말처럼 “나는 너를 용서한다”라는 말을 참을 수 없거나 가증스러운 것, 더 나아가 외설적인 것으로 만드는” “용서의 능력을 부당하게 가로채버리는” “주권의 주장”이다(데리다, 2016: 261).

하지만 정치적 용서가 갖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중국의 전범정책이 홀로코스트 및 여타의 국가폭력에 대한 이행기 시기의 정치적 용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집단적 죄와 용서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명료한 기준을 제시했던 프랑스의 유대인 철학자 장켈레비치가 제시한 첫 번째 원칙, 즉 용서는 용서가 ‘요청돼야만’ 용서에 동의하거나 용서에 동의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원칙(Jankélévich, 1971: 50-51; 데리다 2019: 29에서 재인용)을 적어도 신중국의 사례는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 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인죄 및 탄백의 절차는 푸순 전범관리소에서 전범들 개개인에게 요구된 가장 가혹한 시련이자 통과의례였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죄의식을 자각하게 된 전범들은 자신들이 중국에서 행한 살인과 파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한 그들의 행위는 물론 소수의 예외는 있겠지만 결코 형량을 줄이거나 수용소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기응변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는 4장 전후 중귀련의 평화활동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특히 과거 중국에서 귀환한 전범들에 대한 임상 연구를 통해 죄의식의 문제를 고찰한 정신분석의 노다 마사아키(野田正

彰)가 언급한 두 개의 사례, 즉 귀환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 자신의 죄를 묻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인간의 전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인물은 과거 관동현병대의 헌병으로 ‘특고(特高)의 신’이라 불렸던 쓰치야 요시오(土屋芳雄)이다. 패전 후 소련의 하바롭스크 수용소로 끌려갔다가 1950년 7월 중국으로 이송되어 푸순에 수감된 그는 「그 가족까지(その家族まで)」라는 제목의 수기(1956.1)를 작성 후, 1956년 7월 기소유예로 석방, 귀국했다. 그는 다른 중귀련 회원들처럼 귀국 후 자신의 가해 체험을 증언하는 활동을 지역에서 계속 이어가다가, 예전 중국 치치하얼에서 헌병으로 근무하던 당시, 자신이 위법적으로 살해한 한 중국인의 남은 가족들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자 1990년 중국을 방문해, 유족인 딸을 방문하고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노다 마사아키, 2022: 324-348). 그의 여정은 일본의 한 지역 민방(山形テレビ)에서 〈어떤 전범의 사죄(ある戦犯の謝罪)〉라는 다큐멘터리로 제작 방송되기도 했다. 생전의 마지막 강연에서 전쟁에 관련된 일체에 굳건히 반대의지를 표명하고, 만약 그런 힘이 부족하여 군대에 소집된다면 어떻게든 도망칠 것을 권하며, “저는 청년 시절 14년의 죄과를 30년 이상 참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고통이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나와 같은 잘못과 고통을 겪은 여러분과 아이들이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이카 야스시게 편저, 2017: 289-290).”라는 말로 강연을 끝맺는 옛 전범의 목소리에는 평생에 걸쳐 자신의 죄를 묻고 용서를 구해온 자의 깨달음과 절절함이 깃들어 있다.

노다 마사아키가 소개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은 쓰치야 요시오와 같은 헌병대 소속인 미오 유타카(三尾豊)이다. 전쟁 당시 그는 체포된 정치범을 정당한 절차도 없이 731부대로 이송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 역시 센다이 재판의 증언 때 중국인 유족들에게서 “헌병들아, 내 남편을 돌려다오”란 말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느꼈던 회의와 부끄러움이 평생에 걸친 증언과 반전평화운동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당시 731부대로의 이송은 생체실험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체포된 정치범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헌병인 자신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단지 수감자를 이송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사실을 유족들의 절규를 들었을

때 비로소 자각하게 된 것이다. 이후 그는 자신이 이송했던 정치범의 유족들을 찾기 시작하고, 마침내 1995년 여름, 중국 하얼빈을 방문하여 유족인 아들을 찾아 진심으로 사죄를 구한다(노다 마사아키, 2022: 299-321). 처음엔 아버지의 살해범을 용서할 수 없다고 격렬히 비난하던 유족 역시, 그의 거듭된 진정 어린 사과와 이후 중국 측 유족들이 제기한 난징대학살 및 731부대 세균실험 관련 손해배상 재판에 병상의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나와 일본군의 침략행위를 증언하는 모습을 보고 점차 마음을 열게 된다. 재판 지원 및 계속된 증언 활동은 그의 병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고, 그는 1998년 83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떴을 때, 피해자인 중국의 유족으로부터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이 왔다고 한다(熊谷伸一郎, 2005: 49-54).

위의 두 사례는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단순히 일회적인 행위가 아닌, 자신이 왜 잔학한 행위를 했는지 분석하고, 그것을 피해자에게 말하고, 나아가 그 죄를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행위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중귀련의 마지막 회장인 도미나가 쇼조(富永正三)는 2001년 겨울, 죽기 직전의 병상에서, 침략전쟁에 가담해서 많은 가해 행위를 해버린 것, 그것에 대한 죄의식, 철저한 인죄 의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귀련 정신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그의 유언은 용서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기적(시몬 베유(2021)라면 ‘은총’이라고 불렀을)에 대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중귀련[中歸連]: 인용자 주) 활동의 중심 과제는 침략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철저히 사회를 구하고 용서를 얻는 것이었다. 두 사람(쓰치야와 미오: 인용자 주)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했다. 미오 군이 죽음에 이르자 피해자에게서 조의문이 왔다. 미오 군 등의 활동은 우리 활동의 도달점이다. 이 행위로 우리가 모임을 이끌어간 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생각한다(熊谷伸一郎, 2005: 55).



#### IV. 인죄와 용서의 소산으로서의 ‘중귀련’의 평화주의

푸순의 실험이 갖는 놀라운 점은, 전범들의 인죄와 지난 과오에 대한 참회가 수용소 수감 기간 중에 그치지 않고, 1956년 일본으로 귀환한 이후에도 하나의 집단적 활동으로 평생에 걸쳐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에 있다.<sup>7</sup>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감된 전범 1,062명 중 기소 면제된 1,017명은 모두 그해 7월에서 8월에 걸쳐 귀국선을 타고 마이즈루 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시베리아 억류 기간까지 포함 11년여에 걸친 유배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환대만은 아니었다. 이미 패전으로부터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난 전쟁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가던 일본 사회에서, 인민복을 입은 채 고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에게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이들의 존재는 확실히 이질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귀국 후 그들은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도公安 경찰의 감시와 ‘빨갱이’, ‘세뇌’ 집단이라는 사회적 편견에 시달려야 했다. 그들이 귀국한 1956년은 “더 이상 전후가 아니다(もはや戦後ではない!)”라는 당시의 슬로건이 상징하듯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미디어나 교통의 미발달, 그리고 피해국인 아시아 각국의 내부 정치 사정 때문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일본에 들리는 상황이 아니었다. 더욱이 복원한 병사들이 전장의 사실을 공적으로 말하는 일도 없었을 뿐더러 저널리즘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 사회 전반에서 전후책임 문제가 제기되기는 어려운 시대였을 지도 모른다. 그러한 상황에서 돌연 일본사회에 나타나 자신들의 가해행위를 말하기 시작한 과거 전범들에게 이해가 결여된 언사나 냉소가 반사적으로 던져진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고도 할 수 있다(熊谷伸一郎, 2005: 122-123).

<sup>7</sup> 이는 당시 중국을 경유하지 않고 일본으로 귀환한 대다수의 일본군 병사들의 전후의 삶과 중국 귀환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결정적 차이이다. 1950년, 중국으로 인도되지 않고 시베리아에 그대로 억류되어 있었던 전범들 역시 늦어도 1956년 말경에는 모두 귀국한다. 이들 역시 시베리아에서 지내는 동안 민주운동 등의 경험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형성했다. 하지만 귀국 후 공산당에 집단 입당하거나 적기를 휘두르며 반제운동에 가담하는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경제가 급속하게 회복되면서 그들의 운동의 사회적 파장은 크지 않았다(김효순, 2009: 194-195).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도착 직후 앞으로의 자신들의 운동 방향을 제시한 ‘마이즈루 방침’을 결의했다. 물론 여기에는 자신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보상도 요구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만, “후반생(後半生)은 그릇된 길을 걸었던 전반생(前半生)과 결별하고 전범관리소의 생활 속에서 체험한 인도적 대우와 중국의 평화정책을 일본국민들에게 알리며 일중우호의 길을 실현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 노력한다(中国帰還者連絡会 編, 1996: 27)”라는 방침의 첫 번째 항목에 잘 명기되어 있듯이, 자신들의 앞으로의 운동의 방향성이 일중우호와 평화에 있음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들은 그해 10월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의 공연장에서 〈중국전범 귀국 기념 문화공연〉을 두 차례 거행한 후, 일단 해산한다.

이후 조직 구성을 위한 여러 물밑 작업을 거치면서 ‘중귀련’(중국귀환자연락회, 中国帰還者連絡会)이 공식으로 발족한 것은 귀환 1년 만인 1957년 9월 22일, 제1회 전국대회를 통해서이다. 제1회 대회 때 내건 목적은 보상요구와 상호원조, 친목이 중심이었지만, 1960년 2회 대회부터 과거의 반성에 기초한 반전평화와 일중우호라는, 이후 해산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중귀련의 기본노선이 확정되었다.<sup>8</sup> 개별 회원들은 전국 각지의 일중우호협회에 가입해 활동하는 한편, 중귀련으로서의 독자적인 활동인 전장에서의 가해행위의 증언도 이 시기부터 활발히 전개해 나갔다.

중귀련 발족 전후로 이들 중국에서 돌아온 전범들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은 1957년 3월, 중국전범들의 수기집인 『三光: 日本人の中国における戦争犯罪の告白』(殺光, 燒光, 搶光)의 출간이다. 물론 이 책은 이들 전범들이 직접 출간에 관여한 것은 아니며, 출판사인 고문샤(光文社)의 편집자인 간기하루오(神吉晴夫)가 중국신문공작단연락회의 초청으로 중국에 방문했던 1956년

<sup>8</sup> 그 기본노선은 제2회 전국 대회 규약(1960년 10월 22일)의 2조와 3조에 잘 표명되어 있다.

제2조 본회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에 참가하고 혹은 이를 승인한 것에 대한 인도적 반성을 깊게 하고 이러한 사실을 국민 가운데 널리 퍼뜨려 평화와 일중우호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으로서 (1) 침략전쟁의 죄악에 대한 반성을 심화하기 위한 학습과 이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 (2) 군국주의 부활에 반대하며 민주주의의 건설과 일중우호를 목표로 한 제반활동 및 이를 위해 각 단체와 연대 (3) 전 회원 공통의 이익을 지키는 활동 및 상호원조, 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사업(中国帰還者連絡会, 1996: 75).

6월경 입수한 당시 중국 전범들의 수기 모음집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 책은 1쇄 5만 부가 20일 만에, 2개월 동안 20만 부 판매되는 등 놀라운 판매고를 올렸다. 하지만 우익의 협박 등에 의해 출판사가 증쇄 중단을 결정하자, 출판에 협력해오던 중귀련은 독자적으로 출간을 결정하고, 서명을 『侵略: 中国における日本戦犯の告白』으로 변경, 출판사도 신도쿠쇼샤(新読書社)로 변경하여 1958년 7월 개정증보판으로 재출간한다.<sup>9</sup> 『삼광』 출간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이 정식 발족을 준비하던 중귀련에게 있어 이후 모임의 방향을 결정짓게 된 것은 분명하다(大澤武司, 2016: 184).

이후 중귀련은 회원들의 개별적인 증언활동 외에도 전시기에 일본에 강제 동원되어 일하다가 희생된 중국인포로들의 유골송환 운동이나 류렌런(劉連仁) 사건<sup>10</sup>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반전평화 및 일중 우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하지만 중귀련의 애초 결성 목적인 반전평화운동과 국가에 대한 보상요구운동은 그 성격상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보상요구 투쟁의 기초 자료가 되는 「보상금요구서(보상요구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일본 정부에 장기 억류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원병사들로서는, 과거 자신들의 인죄 정신의 원형이었던 개인의 책임 문제, 그리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자살이나, 학살, 고문, 강간 등의 범죄 행위를 기술했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중귀련에 설치된 ‘보상요구

<sup>9</sup> 이후 1963년 고분샤는 다시 『삼광』의 증쇄를 결정하고 1982년에는 같은 출판사에서 다른 수기가 『新編 三光』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고 다시 우익의 방해로 절판된다. 현재는 두 책이 『完全版 三光』으로 반세샤(晩聲社)에서 출판되고 있다.

<sup>10</sup> 류렌런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중국 산둥성에서 ‘노무자 사냥’으로 납치되어 일본 홋카이도 탄광으로 끌려온 중국인이다. 전쟁이 끝난 지 13년이 지난 1958년 2월 8일 홋카이도 이시카리군 도베쓰 초의 눈 덮인 산속의 작은 동굴에서 그가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전후 일본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중귀련 회원들 중에는 류렌런과 같은 산둥성의 중국인들을 납치하는 등의 ‘노무자 사냥’에 적극 가담한 제59사단 소속부대원들도 많았기 때문에, 중귀련 홋카이도 지부는 이 사건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회원들을 모아 바로 류렌런 구원활동에 나서게 된다. 중귀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을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강제 동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데는 실패하지만, 류렌런은 1958년 4월 10일 중국으로 돌아간다. 이후 류렌런은 1990년대 들어서 활발해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전후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소송에 동참하여, 2001년 7월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소송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전판승소 판결(도쿄지법)을 받는다. 하지만 류렌런은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2000년 9월 2일 사망해서 승소 소식을 듣지 못했다. 더욱이 4년 후의 2심 판결에서 도쿄 고법은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고, 2007년 최고재판소가 고법 판결을 확정한다(이하 류렌런 사건에 대해서는 김수용(2025: 201-207)을 참조).

문제특별위원회' 역시 이 기재 항목을 '침략행위의 개관'으로 수정하고, 그 기재에 대해서는 모두가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죄'라고 표현할 것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중귀련 내부에서도 인죄 정신으로부터의 후퇴라는 비난이 제기되었고, 중귀련 운동의 기본방침을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이어졌다(大澤武司, 2016: 195-205 참조).

보상요구를 둘러싼 중귀련의 내부 대립에 더욱 불을 붙이게 된 계기는 1960년대 중반부터 중국에서 일어난 '문혁', 즉 '문화대혁명'이었다. 1966년 10월 중국과 일본의 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일중우호에 관한 공동성명」의 지지 여부를 둘러싸고 1966년 10월 일중우호협회가 분열하면서, 그 여파로 중귀련 역시 1967년 2월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중귀련 정통'과 이에 거리를 두는 '중련(中連)'으로 분열하는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 분열 후 '중귀련 정통'이 보상 요구 운동으로 지체되었던 정치적 활동, 특히 일중우호활동 및 국교정상화에 적극 나섰다. '중련'은 중국과의 교류를 지속할 수 없게 되면서 국내 반전평화운동에 몰두하게 되었다(김수용, 2025: 230; 中国帰還者連絡会 編, 1996: 144-152 참조).

하지만 문혁의 종식, 그리고 1972년 중일 외교정상화 등의 정세 변화에 따라 1970년대 중후반부터 중귀련 정통 내부에서도 기존 노선의 변화가 나타나고, 1981년 6월 중국 공산당이 문혁을 마오쩌둥의 극좌적 오류라고 규정하는 평가가 나오면서, 문혁 지지 여부를 둘러싼 중귀련 내 분열 및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 재결합의 계기가 된 것은 1983년 중귀련 정통의 푸순 방문, 그리고 그 방문 결과로 이어진 1984년 김원, 오연호, 최인걸 등 옛 푸순 전범관리소 지도원들의 일본 초청이었다. 분열된 중귀련이 통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옛 전범 관리소 직원들의 마음에 부응하듯 분열된 중귀련은 옛 푸순 전범 관리소 지도원들과의 만남 이후 1985년 11월 그 만남의 기록인 『28년만의 재회』를 출간하고 다음 해인 1986년 10월, 20년 만에 원래 이름인 '중국귀환자연락회'로 재결합한다. 문혁의 여파로 분열된 일중 우호단체 중 다시 결합한 단체는 중귀련이 유일하다(김효순, 2020: 370-374).

재결합 이후 중귀련의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1988년 10월, 기념관이 된 푸순전범관리소 구내에 6미터 높이의 사죄비(向抗日殉難烈士謝罪碑)를 건립한 것이다. "항일순란 열사들에게 무한한 사죄의 성의를 바치며, 다시는 침략전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평화와 일중우호의 맹세”가 새겨진<sup>11</sup> 이 비는 1997년에 일본의 지바(千葉) 현에 건립된 ‘중귀련비’와 더불어 자신들의 지난 활동에 대한 일종의 총결산으로서의 기념비(monument)였다. 이미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회원들도 서서히 고령에 접어들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6년에 발족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일본 사회의 ‘자학/죄악사관’을 비판하며, 이러한 ‘일본죄악사관의 최대의 근원’이라며 중귀련의 『삼광』, 『신편 삼광』, 『천황의 군대』 등을 비판하자, 중귀련은 이 도전을 받아들이기를 결의한다. 1997년 6월 계간 『중귀련』 창간은 ‘젊은 세대들에게 과거 전쟁의 진실을 계승하는 것’의 필요성을 통감하면서, 조직으로서 이러한 싸움에 맞서기 위한 시도였다. 중귀련은 2025년 현재까지 63호가 발간된 상태다. 2002년 중귀련 회장 도미나가 쇼조(富永正三)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해 4월 20일 중귀련은 45년에 걸친 긴 싸움의 막을 내리고 활동을 중지했다. 중귀련 회원들이 고령으로 사망하는 가운데, 그들이 남긴 소중한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2006년 사이타마 현 가와코시(川越) 시에 ‘중귀련평화기념관’이 건립되어 현재 NPO법인으로 활동 중이다.

## V. 나가며: 인죄와 용서의 사상을 계승하기 위하여

현재 일본에는 패전 이후 해외에 있던 자국민들의 본국으로의 인양/귀환(引き揚げ)을 기억하는 두 개의 장소가 있다. 하나는 전후 주요 인양 항구였던 교토부 북부 마이즈루에 위치한 ‘마이즈루인양기념관(舞鶴引揚記念館)’이다. 이곳에 소장된 570점의 인양 관련 자료가 2015년 세계기록유산(‘마이즈루로의 생환 1945-1956, 시

<sup>11</sup> 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15년에 걸친 일본군국주의의 대중국침략전쟁에 참가해서, 태우고, 죽이고 약탈하는 도천(滔天)의 죄행을 범하고, 패전 후 푸순과 타이위안의 전범관리소에 구금되었습니다. 거기서 중국공산당과 정부, 인민의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혁명적 인도주의의 처우를 받고 처음으로 인간의 양심을 되찾아, 예기치 않은 관대정책에 의해 단 한 명의 처형자도 없이 귀국이 허용되었습니다. 지금 푸순전범관리소가 복원되는 이 시점에 이 땅에 비를 건립하고, 항일 순산 열사들에게 무한한 사죄의 성의를 바치며, 다시는 침략전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평화와 일중우호의 맹세를 이 비에 새깁니다(1988년 10월 20일 중국귀환자연락회).”

베리아 억류 등 일본인의 본국 인양기록[舞鶴への生還-1945-1956 シベリア抑留等日本人の本国への引き揚げの記録]으로 등재되면서, 이곳은 시베리아 억류라는 전후 일본의 피해자 담론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기억의 장소로 자리매김되었다.

또 하나의 장소는 도쿄 시내 중심가인 신주쿠의 스미토모 빌딩 33층에 위치한 ‘평화기념전시자료관’이다.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위로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1988년 제정된 「평화기념사업 특별기금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0년에 건립된 이 기념관은 총무성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영문명인 ‘Memorial Museum for Soldiers, Detainees in Siberia, and Postwar Repatriates’을 살려, 2024년부터는 ‘귀환자들의 기억 뮤지엄’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다. 별칭이 의미하듯, 이 기념관은 전후 시베리아에 강제 억류된 일본 병사들의 고통스러운 체험을 주로 다루면서, 부수적으로 전후 해외 각지에서 본국으로 귀환한 일반 국민들의 서사를 함께 전시하고 있다.

이들 두 기념관은 시 혹은 국가에서 충분한 보조금을 받으며 비교적 여유로운 부지에 최신식 전시시설, 그리고 학예사와 정규 직원들을 갖추고 있다. 이는 농가의 창고를 개조한 낡은 공간에 보수 없이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는 학예사와 상임이사 두 명이 일주일에 3일 부분 개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귀련평화기념관의 현실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중귀련평화기념관 상임이사 세리자와 노부오(芹沢昇雄) 씨의 솔직한 고백처럼, 현재 기념관은 “고령이 된 회원들의 사망으로 유실되어 가는 자료를 보존하는 수준”(2025년 2월 5일 필자와의 인터뷰) 정도의 소박한 자료관에 불과하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글의 주인공인 중귀련 회원들의 대다수가 전후 시베리아 억류를 경험한 바 있고, 1956년 기소면제 이후 중국에서 마이즈루 항을 통해 귀국한 귀환 체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한 두 기념관에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기억의 장소에서 이들의 경험이 송두리째 빠져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전후 일본 사회 주류의 전쟁의 기억과 이들의 전쟁 체험이 얼마나 상치되는지, 그리고 이들 중국 귀환자들의 기억을 현 일본사회가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 전장에 있던 대다수 구일본군 복원 병사들과 중국 귀환자들의 체험에서 공통적으로 겹치는 것은 시베리아의 억류 경험이다. 이 억류의 경험이 피해자 서사로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는 일본 사회 내에서도 이미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富田武, 2016; 加藤聖文, 2020). 또한 이러한 피해자로서의 자각이 은급 지급 등과 같은 정부에 대한 경제적 보상운동으로 전개되어온 역사도 양자는 일정 정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시베리아 억류자 서사와 중국 귀환자 서사의 결정적 차이는 ‘인죄’라는 경험이다. 이 인죄라는 경험이 이들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 중귀련의 초기 모임 결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구니토모 순타로는 보상요구를 둘러싸고 중귀련의 내부 분열이 발생하던 당시, 모임의 방향성 전반에 대해 자신이 쓴 제안서(『国友提案』)에서 보상 요구 운동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중귀련이 투쟁해온 보상 요구 운동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의의를 포장하든 그것은 본질적으로 소련 귀환 전범의 요구 운동과 재외 자산 보상운동과 동일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들 회원 중에는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독단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소련 귀환 전범이나 재외 자산보상운동 지지자들 / 인용자 주)은 현재 정부에 고개를 숙이고 있고, 우리는 현 정부와 투쟁하고 있다”, “그들은 군국주의 부활의 지지자이며, 우리는 군국주의의 죄악을 폭로하는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하지만 표현은 반대일지라도, 결국 보상금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며 구실이 다를 뿐입니다. ... 보상 요구를 단순히 중귀련의 목적 달성 운동에 직결시켜 반정부 투쟁에 결합하는 것은 다른 면에서는 “정부에 책임이 있고, 우리는 희생자다”라는 말로, 이는 ‘인죄의 정신’과 근본적으로 대립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중국 인민에 대해서는 가해자이며,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희생자이다”라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이 가해자=피해자 사상은 옳은 것일까요? 우리에게 인죄가 가능했던 것은 자기가 저지른 죄행을 명령이나 법률이나 제도의 강요가 아니라(희생자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간적 책임으로 생각하며, 속아서 근로 인민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가해자가 되었다)는 반성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 아닐까요(中国帰還者連絡会 編, 1996: 103-104)?

본론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러한 인죄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다시 말해 인죄와 하나의 세트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이들 가해자들에 대한 피해국 중국, 나



아가 피해자인 중국 인민의 용서였다. 보복의 정반대로서 용서라는 행위에 대해 아렌트는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용서는 보복의 정반대이다. 보복은 죄에 대항하는 반동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처음 잘못된 행위의 결과에서 끝이 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과정에 묶이게 되어 모든 행위에 내재하는 연쇄적인 반동을 허용하게 되며 그것은 무한한 과정이 된다. 보복은 잘못에 대한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반동이고 행위과정의 환원불가능성 때문에 예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용서의 행위는 결코 예견할 수 없다. 용서는 예기치 않은 형식으로 일어나는 유일한 반동이다. 그래서 반동일지라도 행위의 본래적 성격을 갖는다.” 즉 “자신이 무엇을 행했는가를 알지 못하고, 알 수 있더라도 행한 것을 되돌릴 수 없는 무능력인 환원불가능성의 곤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용서하는 능력”이라는 것이다(아렌트, 2019: 305-306).

하지만 아렌트는 용서하는 능력과 함께 미래의 불확실성인 예측불가능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는 인간의 능력”의 중요성을 함께 역설한다.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야말로 “미래라는 불확실성의 바다에 안전한 섬을 세우게” 하며, “이 섬이 없다면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지속성은 물론이고 연속성조차 갖지 못한다(아렌트, 2019: 301)”는 것이다. 중귀련 회원들의 참회는 그들이 전쟁에서 적이라고 간주한 존재들에게 입힌 보상할 수 없는 엄청난고 순전한 파멸을 패전 이후 전범 수용소에서 스스로 대면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다. 수용소에서의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인죄와 탄백의 과정을 거듭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깊이 뉘우친 후, 용서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전후 중귀련이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그들이 했던 일련의 반전평화운동은 자신들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자신들의 범죄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니, 전후의 반전평화운동을 통해 이러한 자각이 심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정신분석의 노다 마사아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전범이자 중귀련 회원인 고지마 다카오(小島隆男) 씨는 신병의 담력을 키우기 위해 살아 있는 포로 중국 병사를 찢어 죽였던(시토즈, 刺突) 당시의 총검 훈련을 회고하면서, 당시 중국에서 죄를 고백하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희생자를 사물로 대하고 있었다고, 다시 말해

가해를 고백하는 상황에서도 살해당하는 중국인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고/못하고 자신의 피 묻은 손만을 떠올리고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재혼을 하고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날, 밤중에 문득 깨어나 다섯 살 난 아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과거 자신이 살해한 어느 중국인 가족 속에 홀로 남은 아이의 얼굴이 아들의 얼굴과 겹쳐지는 순간, 다시금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죄를 자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통렬히 깨닫게 된 계기는 그로부터 또 한참의 세월이 흐른 1989년 자신이 직접 학살에 가담했던 지역에 다시 방문했을 때였다.

옛 침략군대의 중위가 푸순전범수용소에 6년간 수용되어 지낸 뒤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돌아갔다, 이게 얼마나 어수룩한 변명인지 통렬히 느꼈습니다. 죄를 저질렀다, 나쁜 것이었다, 유족에게 죄스럽다, 이런 것들을 겉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죠. 정말로 그 사람들의 피에 사무친 울분에 찬 목소리는 듣고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과거의 전쟁터에 와서 사죄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45년이 지난 일에 대한 사죄’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 애통, 쓰린 마음을 생각하면 무엇을 한다 한들 이루 다 보상할 수 있겠어요. 결국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중일 우호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노다 마사아키, 2023: 193-194).

하지만 그러한 참회의 작업은 결코 평이하지도, 또 단순명쾌하지도 않다. 과거의 악행의 그림자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어, 안온한 일상 속에서 이전의 통렬한 반성들을 쉽사리 잠재워버리곤 한다. 산시성 잔류부대 출신으로 1948년에 인민해방군의 포로가 되어 1954년 귀국한 오쿠무라 와이치(奥村和一)는 잔류부대의 실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개미의 병대(蟻の兵隊)〉[이케야 카오루(池谷 薫), 2005] 제작에 참여, 촬영을 위해 2004년 과거 자신이 일본군 병사로서 중국인 포로 학살(刺突)에 참여했던 현장인 산시성의 한 마을을 재방문한다. 그런데 당시의 관계자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도중 학살의 피해자가 단순한 농민이 아니라 ‘적’의 내통자였다는 사실이 언급되자 그는 바로 “(내통자라면) 처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더욱이 이케야 감독에게 지적당하기 전까지 살해당한 측에 책임을 물으며 ‘군대의 논리로 그들을 추궁해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시간이 지난 후, “너무도 중요하고

있던 일본군의 사고가 아직 자기 안에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충격”을 이야기하며, “나는 일본군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탄식하는 오키무라의 모습은 이 영화의 백미이다(奥村和一·酒井 誠, 2006: 162-165; 石田隆至·張宏波, 2022: 271-275).

중세의 이단 심판과 아우슈비츠, 이행기 시대의 스페인이라는 세 시공간의 역사를 우르젤의 그림 속에 겹쳐 쓰면서(팔림프세스투스, palimpsestus) 이미 저질러진 악을 바로잡는 것은 가능한가라는 묵직한 물음을 던졌던 카탈루니아의 소설가 자우메 카브레(J. Cabre)의 작품 『나는 고백한다』에는 아우슈비츠의 ‘죽음의 의사’ 콘라드 부텐의 우화가 등장한다. 전후 연합군에 체포되어 수용소에 수감된 콘라드는 지금까지 철저히 외면해온, 하지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의 악행에 대해 비로소 깨닫게 되고, 회개의 길을 찾기 위해 수도원들을 전전하다가, 자신이 저지른 악을 바로잡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의 오지에 병원을 건립하고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전념하는 삶을 선택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살해하기 위해 고용된 청부 암살자가 병원을 찾아온다. 죽기 직전 마지막 대화에서 그는 암살자 앞에서 거듭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되뇌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를 바라지 않으며” “그저 이 지옥을 바로잡을 기회를 구할 뿐”이라고 고백하며 경건하게 처형을 받아들인다(카브레, 2020[2]: 374-375).

소설가는 용서는 결코 끝이 아니며—“당신이 저지른 악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바로잡는 것이 가능하다면 말입니다(카브레 2020[2], 340-341)!”—가해자들에게는 자신의 악을 바로잡기 위한 의무가 생의 마지막까지 부과됨을 이 우화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다수의 중귀련 회원들 역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의 삶을 스스로 ‘후반생(後半生)’이라 일컬으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채 자유롭게 사는 삶의 방법으로서 평생에 걸쳐 증언 활동과 평화운동을 계속 하는 삶을 살았다. 전후의 여러 부침들, 그리고 유혹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은 데리다가 역설했던 “절대적으로 용서 불가능한 것을,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모든 가능한 용서의 요소 자체라고 말했던 용서의 불가능성(데리다, 2016: 245)”이라는 아포리아에 대한 하나의 응답일 것이다. 나아가, “절대적으로 이질적이며 서로에 대해 환원 불가능한 채로 남아 있는, 무조건적인 것(순수한 용서)과 조건적인 것(화해의 정치적 쟁점)의 관계를 새로운

발명의 장소와 기회로 만든(윌·크레퓔, 2017: 186)” 소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5년 10월 13일 | 심사일: 2025년 11월 9일 |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2일

## 참고문헌

- 김수용. 2025. “신중국의 전범처리와 중국귀환자연락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원. 1995. 『기구한 인연: 무순전범관리소장 김원 회고록』. 서울: 한울.
- 김효순. 2009. 『나는 일본군, 인민군, 국군이었다: 시베리아 억류자, 일제와 분단과 냉전에 갇힌 사람들』. 파주: 서해문집.
- \_\_\_\_\_. 2020. 『나는 전쟁범죄자입니다』. 파주: 서해문집.
- 노다 마사아키. 2024. 『전쟁과 죄책』. 서혜영 역. 서울: 또다른우주.
- 테리다, 자크. 2016. 『신앙과 지식 / 세기와 용서』. 신정아·최용호 역. 파주: 아카넷.
- \_\_\_\_\_. 2019. 『용서하다』. 배지선 역. 파주: 이숲.
- 도즈, 제임스. 2020. 『악한 사람들: 중일전쟁 전범들을 인터뷰하다』. 변진경 역. 파주: 오월의봄.
- 딤스테일, 조엘. 2024. 『세뇌의 역사』. 임종기 역. 파주: 에이도스.
- 마루카와 데쓰시. 2009. “‘개조’와 ‘인죄(認罪)’: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전범관리소’의 기원과 전개.” 『제노사이드연구』 5: 129-146.
- 베유, 시몬. 2021. 『중력과 은총』. 윤진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 아렌트, 한나. 2019. 『인간의 조건』. 이진우 역. 파주: 한길사.
- 염송심·유지원. 2020. “전후 중국의 일본전범 재판 연구.” 『사림』 71: 317-350.
- 요네야마 리사. 2023. 『냉전의 폐허』. 김려실 역.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 요시다 유타카. 2004. 『일본인의 전쟁관』. 하중문·이애숙 역. 고양: 역사비평사.
- 윌, 프레데릭·크레퓔, 마크. 2017. 『폭력 앞에 선 철학자들: 사르트르에서 테리다까지』. 배지선 역. 파주: 이숲.
- 이영진. 2022. “‘평범한 악’과 함께 살아가기: 아우슈비츠 이후의 윤리.” 『기억과전망』 47: 14-58.

- 카브레, 자우메. 2020. 『나는 고백한다 1-3』. 권가람 역. 서울: 민음사.
- 하나이카 야스시게 편저. 2017. 『인간의 양심: 일본 헌병 쓰치야 요시오의 참회록』. 강천신 역. 파주: 지문당.
- 石田隆至·張宏波. 2022. 『新中国の戦犯裁判と帰国後の平和実践』. 東京: 社会評論社.
- 絵鳩毅. 2017. 『皇軍兵士, シベリア抑留、戦犯管理所: カント学徒、再生の記』. 東京: 花伝社.
- 大澤武司. 2016. 『毛沢東の大日戦犯裁判: 中国共産党の思惑と1526名の日本人』. 東京: 中央公論新社.
- 岡部牧夫·荻野富士夫·吉田裕編. 2010. 『中国侵略の証言者たち: 認罪の記録を読む』. 東京: 岩波書店.
- 奥村和一[ほか]. 2006. “[座談会] 戦争とは何か, 戦争を語り継ぐとは何か: 映画『蟻の兵隊』をめぐって.” 『世界』 第756号: 220-227.
- 加藤聖文. 2020. 『海外引揚の研究: 忘却された「大日本帝国」』. 東京: 岩波書店.
- 熊谷伸一郎. 2005. 『なぜ加害を語るのか: 中国帰還者連絡会の戦後史』. 東京: 岩波書店.
- 国友俊太郎. 1997. “撫順戦犯管理所の体験.” 『中帰連』 第2号: 28-42.
- . 2006. “戦犯は中国当局に「洗脳」されたのか.” 『中帰連』 第36号: 34-43.
- 中国帰還者連絡会 編. 1995. 『覚醒: 撫順戦犯管理所の六年』. 大阪: 新風書房.
- . 1996. 『帰ってきた戦犯たちの後半生: 中国帰還者連絡会の四〇年』. 大阪: 新風書房.
- 坪田典子. 2008. “加害の戦争責任: 「撫順の奇蹟」を事例として.” 『日本オーラル・ヒストリー研究』 第4号: 123-141.
- . 2019. “戦争加害者・被害者間の関係性再構築のための一考察: 中国の日本人戦犯政策を事例として.” 『文教大学国際学部紀要』 30-1: 63-78.
- 富田武. 2016. 『シベリア抑留: スターリン独裁下、「収容所群島」の実像』. 東京: 中央公論新社.
- 林博史. 2005. 『BC級戦犯裁判』. 東京: 岩波書店.
- 吉見義明. 1992. “占領期日本の民衆意識: 戦争責任論をめぐって.” 『思想』 No. 811: 73-99.
- Hunter, Edward. 1951. *Brain-Washing in Red China: The Calculated Destruction of Men's Minds*. New York: Vanguard Press.
- Jankélévich, Vladimir. 1971. *L'imprescriptible*. Paris: Seuil.

Lifton, Robert. 1989[1961]. *Thought Reform and the Psychology of Totalism: a study of 'brainwashing' in China*.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Carolina Press, c1989.

## 영상자료

山形テレビ. 1990. 〈ある戦犯の謝罪〉. 쓰치야 요시오의 중국 방문기.

## Abstract

## Escaping from Evil: The Fushun War Criminals Management Centre Experiment and Postwar Japan's Embrace of Pacifism

Yungjin Le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Following the defeat of Imperial Japan, a significant number of Japanese military personnel were designated as war criminals and subjected to judicial proceedings. Among these, soldiers stationed in Manchuria were detained in Siberia, and subsequently, 969 of them were transferred to the newly established People's Republic of China by the Soviet Union, in 1950. This study seeks to examine, from an intellectual-historical perspective, the rare and ideologically significant experiment in confession (injwe, 認罪) and rehabilitation (gaengsaeng, 更生) conducted over a six-year period (1950–1956) at the Fushun War Criminals Management Centre under the administration of the PRC. Furthermore, it explores how the experiences undergone within this institution shaped the lives and ideological orientations of these former war criminals upon their repatriation to Japan.

The Chinese state's policy toward Japanese war criminals has elicited both laudatory and critical interpretations—ranging from the characterization of the process as “the miracle of Fushun” in terms of moral re-education, to more skeptical appraisals that dismiss it as a case of ideological indoctrination or “brainwashing.” This article engages with these divergent interpretations, critically reassessing the central role of forgiveness within the practice of confession implemented at Fushun.

By tracing the trajectory of these individuals beyond their release—



particularly their postwar reflections on wartime culpability and their subsequent embrace of anti-war pacifism—this study argues that the Fushun experiment was not merely a historical anomaly but was instead a case of enduring philosophical and ideological significance. Ultimately, this paper aims to reinterpret the processes of confession and forgiveness within a broader intellectual-historical framework, shedding light on their transformative potential in the aftermath of war.

**Keywords |** Fushun War Criminals Management Centre, forgiveness, brainwashing, anti-war pacifism

